

野 “정권 무능” vs 與 “탈원전 탓” 난방비 폭탄 책임 공방

가스요금·유류비 인상 화두 부상... '민생 경제' 내년 총선 핵심 변수 민주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 증액' 촉구... 오늘 지자체장 간담회

여야는 올 겨울 가장 큰 화두가 될 25일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민심의 주요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고공리, 고불가, 고환율 등 올해 국내외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민생 경제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움직일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다. 정부

가 민생에 무능하다는 주장을 대어 공세의 포인트로 삼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를 대비시키며 '민생 정당' 이미지 선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을 이번엔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난

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며 "실 민심을 직시해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6일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 문제가 사법리스크 정국을 돌파할 유일한 출구 카드라는 점에서 민심의 피부에 와 닿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스비 폭등은 신평탄에 불과하며 경기침체로 가계 부채가 폭발할 경우, 민생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민심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제시를 통해 내년 총선 승리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을 전임 정부에서 촉발된 문제라며 적극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논리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13% 정도 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난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전

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탈원전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경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민생 경제를 직격할 경우, 민심의 비판이 여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기대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여권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잘 맞물려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민생 이슈가 전당의 핵심 화두로 부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SK브로드밴드 협력사 고용이전문제 해결을 바라는 꽃달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0일 본회의' 민생법 처리

양곡관리법·난방비 대책 등 쟁점... 다음달 6~8일 대정부질문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내달 6~8일에는 대정부질문을 하고, 같은 달 13~14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날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 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의결 및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안소위 직권상정이 이어지면서 쟁점으로 떠오

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송 수석부대표는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데,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생이 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 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존중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2월 2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기간은 28일까지로, 안전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지역 보건의료기관-중앙정부 협업 강화법 발의

김원이 "공식 소통 창구 미흡"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25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

여,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 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 김원이 의원은 결핵환자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및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이재명, 28일 검찰 단독 출석

당내 리스크 최소화 내부 결속 다지기... 비명계 '단일대오'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동행 없이 출석할 전망이다. 25일 당 관계자들 전언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앞서 변호인만 대동한 채 출석하겠다고 한 만큼 대부분의 의원은 이 같은 당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정성 사무총장도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홀로(검찰에) 가겠다는 이 대표의 뜻이 확고하다"며 "당은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이 대표를 격려하는 뜻에서 개별적으로 동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검찰에 홀로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무엇보다 '야당 탄압' 프레임에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감당하고 당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당이 하나가 돼 검찰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며 "무리한 검찰 수사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으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다고 보고, 명절 기간 파악한 민심을 토대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검찰을 비롯한 여권의 '정치 보복'에 맞서 민생을

챙기는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회의에서 "한파와 고물가로 국민께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을 보냈다"며 "국민의 고통에 정치가 반응해야 하고, 공감해야 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파간 반목은 이 대표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은 분위기다.

며칠 새 당내에서 불거진 '천원 당원' 논란은 계파 사이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2일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천원 당원을 비하한 김종민, 이원욱, 조웅천 의원의 징계나 탈당을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김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당비 1000원을 내고 당원으로 가입하는 점을 들어 '팬덤정치가 우려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20년 노하우. 010-3605-5000